

‘농어촌 지키기’ 비례 축소·정수 확대 설전

정개특위, 비례의석 비율 이전…부분 파행까지 이병석위원장 “기준 마련 못하면 확정안 거부 어렵다”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위원회가 지역구 수를 ‘244~249개’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고 발표하면서 비례대표 정수 축소 및 의원 정수 확대 등이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열린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회의 내내 진통을 거듭한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간사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의 안건을 놓고 이견을 보이다가 언론 브리핑을 갖고 상대를 비판하는 등 ‘갑정싸움’까지 벌였으며 선거법심사소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선거구 확정 기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구가 될 줄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농어촌 지역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비례대표 축소가 대선 안 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되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구는 가급적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 지역대표성이 비례대표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비례대표도 사회적 약자와 정치적 소수자를 대변한다”며 “내 배가 고프다고 다른 걸 도둑질하면 안 된다. 솔직하게 의원정수를 논의하자”고 말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농어촌 특별선거구 도입은 위한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며 의원 정수 확대

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은 확정기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데 대해 “선거법에 구체적인 확정 기준이 없어서 확정위가 확정안을 제출했을 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사실상 부재하다”며 “선거법 소위가 확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정개특위는 (법에 명시된 권한인) 확정위의 확정안을 거부하는 것이 어렵다”

고 ‘경고’하기도 했다.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의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 회의장을 찾아 농어촌과 지방의 특수성을 감안해 확정기준에 ‘4개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개특위 선거법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이견으로 합의점 도출에 실패,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산회했다.

한편, 선거구확정위는 이날 밤과 24일 오전 이를 연속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구 숫자를 244~249개 범위에서 확정한다는

당초 결정을 더욱 구체화해 단수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246개 또는 249개로 확정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위가 지역구 규모를 단수로 확정하면 각 지역구의 변동도 사실상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추석 연휴기간 등을 고려하면 여야는 10월 초나 되어서 다시 정개특위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지 못한다면 선거구 확정위가 확정안을 제출하는 10월13일까지도 확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대치 2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회의 진행과정을 두고 이병석 위원장(가운데)과 새누리당 이학재 간사(왼쪽),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간사가 논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野 상임위원장 수난시대

박기춘·박주선 탈당…국토위·문광위원장 자리 무소속에 넘겨

박기춘 국토위원장이 탈당할 데 이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박주선 의원까지 지난 22일 탈당을 선언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민이 깊어졌다. 새정치연합 몫 상임위원장 자리 2개가 동시에 무소속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이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강제할 조항이 없어 새정치연합이 이들 위원장을 교체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 당은 두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들은 당장 직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박주선 위원장은 탈당 기자회견에서 “저는 마음을 비운 사람”이라면서도 “다

만 (교묘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춘 위원장도 사임계를 내지 않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위원장을 면회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위는 야당 간사인 정성호 의원의 직무대행 체제로 한 달 넘게 운영되고 있다.

당의 주류 측 인사들은 두 위원장이 서둘러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새 위원장을 선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

국감 브리핑

“폐탄약 수십톤 헐값 매각…업체 36억 부당이익”

김광진 새정치 의원

육군탄약사가 규정을 무시한 채 폐탄약 수십 톤을 시장 거래가의 16분의 1 가격으로 매각, 해당 업체의 배만 불리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23일 국방부와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폐탄약 특혜매각 감사결과 및 폐탄약 특혜매각 수사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화학무기금비협약으로 육군탄약사에서 보유 중인 CS탄 64t이 시장 거래가격 대비 16분의 1의 값에 매각됐다.

올해 기준 CS탄 분말가격은 kg당 약 6만 원이지만 육군은 A업체에게 지난



거래되지 않더라도 수입하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래단가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며 “육군은 CS탄의 가치를 알 수 없다는 책임회피식 발언을 그만하고, 터무니 없는 가격에 매각한 범죄사실에 대해 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1991년 도입할 당시 단가인 kg당 3700원에 팔았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36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감 인물

자원외교 혈세 낭비·해외자산 부실 매각 질타 한-중 FTA 피해 ‘무역이득공유제’로 대안 제시

주승용 새정치 의원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선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여수 을)이 3선 중진의 관록을 유감없이 과시하고 있다.

주 의원은 국감 직전 국회 상임위를 행사위에서 산자위로 바꿨음에도 자원외교 실패, 한-중 FTA로 인한 농어민 피해, 중소기업 동반성장 문제 등을 놓고 명확한 근거 자료와 확실한 논리, 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로 호평을 받고 있다.

주 의원은 지난 10일 산업부, 21일 자원 공기업 국감에서 무원칙한 자원의 교로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에서만 지난 8년 동안 이자만 4조 원을 낭비했다고 밝힌데 이어 해외 자산도 경제적 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부실 매각되고 있다고 질타, 관계자들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여기에 한-중 FTA 체결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업을 살리기 위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 적절한 대안 제시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지난 14일 중소기업 국감에서는 중소기업 정책 자금의 영남 편중 문제를 지적하고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한 정책자금 배

정을 촉구했다.

지난 19일 한국전력 국감에서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전력 공기업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가 4명 가운데 1명에 그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여건 개선 등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또 혁신도시에 입주한 전력 공기업의 지역 인재 채용이 목표 대비 10.9%에 그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 국감장 분위기를 싸늘해지기도 했다.

이 밖에도 주 의원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 강화, 전통시장 안전성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및 특허 분쟁 대응 능력 제고, 원전 방호시설 안전성 제고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임동욱기자 tuim@

탁상시계형 몰래카메라 시연 후 ‘근절법’ 제안

호남 인사·R&D 예산 차별, 시정 답변 받아

장병완 새정치 의원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치닫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몰래카메라(몰카) 관리 문제 ▲국가 R&D기관장 인사 특검지역 편중 문제 ▲기가인터넷 망 지역편차 문제 ▲일베사이트 폐쇄 등 시의성 있고 지역에 꼭 필요한 굵직한 이슈들을 들고 나와 국감을 선도해 나간다는 평을 받고 있다.

우선 장 의원은 지난 14일 미래부 국감에서 탁상형시계 몰래카메라를 직접 시연해 보이며 최근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몰래카메라 남용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으로 ‘몰카근절법’이라는 대안까지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장 의원이 발의한 ‘몰카근절법’은 그동안 사후적 처벌에만 머물렀던 몰카 관리를 수입·제조·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관리토록 하는 등 우리 사회의 몰카 인식과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꾼 법안으로 평가받았다.

또 장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역차별 문



제를 정조준해 정부 부처 책임자들의 진땀을 빼게 했다. 먼저, 과거 정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기관장 인사의 출신지 영남 편중과 이로 인한 R&D 예산 차별문제를 집중 부각시켰으며, 결국 미래부로부터 향후 인사와 예산 배분에서 지역균형을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더불어 지역 ICT·에너지 산업의 핵심인프라가 될 기가인터넷 망 구축률이 서울, 대구 대비 광주지역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정부로부터 향후 광주 등 망 커버리지가 낮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사업 진행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지난 10일 방송통신심의위 국감에서 인터넷상 역사 왜곡과 지역 비하 표현 급증 문제를 지적,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일베사이트의 조속한 폐쇄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PT, 주택, 상가, 대지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임대보증금 대출

감정가 대비 70% 가능

최대 2,000만원 가능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 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키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